

2017  
제10호

발간년월 2017년 9월(통권 제10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현안연구보고서]

## 갯벌복원사업, 원칙과 기준, 절차 등 제도정비를 통한 체계적 수행 필요

육근형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ykh690@kmi.re.kr/051-797-4733)

최석문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leedsud@kmi.re.kr/051-797-4738)

김지윤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jiyoon9887@kmi.re.kr/051-797-4739)

과거 많은 갯벌이 매립과 간척을 통해 농지나 산업단지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찬반 논의를 거치면서, 우리사회의 갯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해 자연자원을 보다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갯벌은 과거처럼 매립의 대상이라기보다 다양한 가치를 지닌 보전의 대상이 되었고, 기존에 매립되었던 토지를 갯벌로 되돌리는 갯벌복원 사업도 일부 이루어졌다.

갯벌복원사업은 지형의 변화와 같은 물리적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킴으로써 갯벌이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산물 생산지가 되는 동시에 국민 다수에게 생태환경을 체험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해준다.

지금까지 갯벌복원사업은 주로 폐양식장이나 폐염전, 또는 노둣길(만조시에 물에 잠기는 연륙연도교)로 해수의 흐름이 막혀 갯벌 상태가 악화된 곳을 대상으로 약 10개소의 시범사업을 수행했고 여기에 약 2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시범 사업 중 일부 갯벌의 생태계가 회복되어 갯벌생물이 정착하고 주변의 수산물 생산도 늘어나는 등 복원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갯벌복원사업의 관리체계가 미비된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된 시범사업은 사업 추진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특히 법률적 또는 행정적 측면에서 사회적 인식과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법률근거나 행정지침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갯벌복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갯벌복원은 사업별로 복원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복원사업에 투입

---

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복원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적절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복원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이 시행되고 준공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으로 갯벌복원사업의 목표가 달성되는지, 후속조치를 통해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수요를 초과하는 쌀 생산과 수입 확대에 따른 농지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간척농지를 다시 갯벌로 되돌리는 이른바 ‘역간척’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같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하구개발과 갯벌복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갯벌복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복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새로운 법률에 반영하고, 실제 사업과정에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 역할 등을 행정지침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해야 하는 시점이다.

---

## 2010년 이후 산발적으로 갯벌 복원 시범사업 시행

### ■ 2000년대 새만금 간척 사업 지속에 대한 사회적 논의 이후 정부 지원을 받는 갯벌 복원 사업 산발적으로 실시

- 2010년 이후 서남해안의 폐양식장, 폐염전, 노둣길을 중심으로 복원 사업을 실시함

### ■ 폐양식장과 폐염전의 소규모 제방을 개량하거나 노둣길에 통수로를 설치하여 해수순환을 복원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

- 10개소에 총 2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폐염전이나 폐양식장으로 방치된 2.04km<sup>2</sup>를 갯벌로 복원하고 노둣길로 해수의 순환이 저하된 곳에 통수로를 설치하여 훼손된 갯벌을 복원함
- 그 외에 갯벌에 설치되어 있는 폐말뚝을 제거하는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 노둣길이나 제방을 교량화하고, 폐염전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갯벌과 염생식물 등을 복원함

표 1. 2010년 이후 갯벌복원 사업 현황

번호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예산	주요 내용
①	인천 강화군 동검도 연륙교	0.2km <sup>2</sup>	2014~2016	50억원	제방 교량화
②	전북 고창군 심원 폐양식장	0.96km <sup>2</sup>	2010~2013	107억원	갯벌 복원
③	전남 무안군 현경면	0.2km*50m	2013~2014	4.3억원	기수역 복원
④	전남 신안군 증도·화도	1.2km*3.5m	2012~2014	19억원	노둣길 통수로 설치
⑤	전남 신안군 병풍도·대기점도	1.05km*3.5m			
⑥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소기점도				
⑦	전남 신안군 소기점도·소약도				
⑧	전남 고흥군 풍양면 매곡리지선	0.2km <sup>2</sup>	2014~2015	4.2억원	폐양식장, 말뚝제거
⑨	전남 순천시 농주리 폐염전	0.12km <sup>2</sup>	2010~2012	25억원	갯벌 복원
⑩	경남 사천시 비토섬	0.56km <sup>2</sup>	2010-2012	20억원	제방 교량화
총 계		2.04km <sup>2</sup>		229.5억원	

자료 : 해양수산부(2016), 『갯벌생태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 p.21

## 갯벌 복원사업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복원효과 제고 필요

### ■ 시범사업 10개 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 순환이 회복되면서 갯골이 다시 나타나고 갯벌의 생물다양성이 증가하는 등 복원 효과 확인

- 갯벌 생태자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해양수산부(2016)에 따르면, 일부 사업지역에서 갯벌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고 바닷새 등이 도래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 시범사업 시행 결과 복원의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원사업 이후 환경변화 분석과 복원효과의 활용 부족

- 사업별로 갯벌복원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유통에만 방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였고, 상당수의 사업에서 복원 전후의 환경변화가 모니터링 되지 못함
- 일부 사업지역에서는 폐염전이나 폐양식장의 독을 오히려 돋우고 보강한 후 도로를 가설하고, 수문에 의해 제한적으로 해수를 유통시켜 사업대상지역을 공원 형태로 정비하는 경우도 발생함
- 갯벌로 복원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내지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갯벌생태계의 복원과 어장 활용 등 갯벌복원의 본질적 목적과 다르게 진행됨
- 많은 경우 갯벌복원 사업 이후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복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복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지 못해 차기 갯벌복원 사업에 필요한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

그림 1. 공원을 조성한 과거 갯벌복원 시범사업 사례 지역



자료 : 해양수산부(2016), 『갯벌생태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 p.26

## ■ 갯벌복원 사업계획의 수립에서 대상지 선정, 사업 실시, 사후 모니터링 등 복원사업 전 과정에 대한 지침과 기준 필요<sup>1)</sup>

- 갯벌복원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기준을 제시해 갯벌복원 사업이 관리되도록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함
- 갯벌복원 사업은 훼손된 갯벌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생산하거나 갯벌체험 등 갯벌의 공익적 가치를 환원하는 데 근본적인 목표와 지향점을 두고 있어 연안정비사업이나 친수공간 조성과는 달리 갯벌의 생태적 특이성을 고려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 갯벌복원 계획의 수립 시 복원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생태적, 공학적 기술의 뒷받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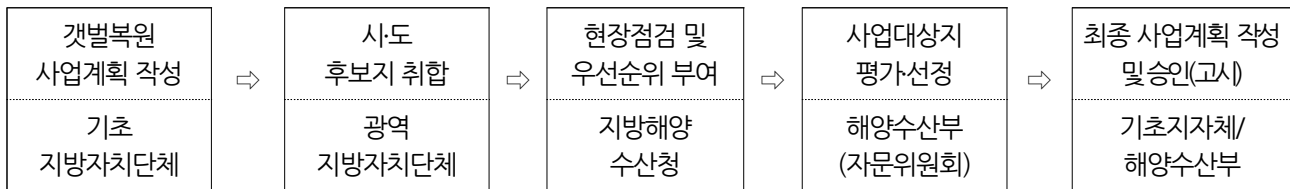
- 복원사업을 통해 복원하려는 갯벌의 환경 또는 생태계 상태와 같은 구체적인 복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밝혀내 필요한 사업과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갯벌복원을 하고자 하는 후보지역 중 복원의 목표가 명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제시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시작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지역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갯벌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물리·생물학적 환경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복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 정부보조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사업 선정기준과 진행 절차를 사전에 제시

- 관할해역에서 갯벌복원을 원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원하는 후보지역에 대한 복원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취합하여 우선순위를 매겨 해양수산부에 제시함
-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복원계획을 지역 사정에 밝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은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함
-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받도록 함

1) 이하 갯벌복원 사업에 필요한 항목에 기준에 대한 내용은 육근형 외(2017) 『갯벌 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 모형 개발 방향』(in press)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2. 갯벌복원사업 선정 절차(안)



자료 : 저자 작성

## ■ 갯벌복원 사업지역의 선정은 복원 목표의 타당성, 방법의 적절성, 복원의 파급효과, 복원 관련 거버넌스 여부, 복원지역 사후관리 등의 기본원칙을 고려

- 복원사업의 성격 상 단순 토목사업이 아닌 생태계의 복원과 이의 활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적절한 공법의 선정과 사후관리가 사업 선정 초기부터 고려되어야 함(표 4 참조)
- 갯벌 등 하구환경에 대한 복원사업을 먼저 시행한 미국은 “하구서식지복원전략(Estuary Habitat Restoration Strategy 2012)”<sup>2)</sup>에서 성공적인 복원을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하구복원위원회는 ① “생태계에 기반한 접근”으로 생태계의 기능과 서비스를 회복할 것, ②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외부의 에너지가 아닌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자생력 있는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③ 복원사업의 실행자 사이에 “협력과 조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을 복원의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혁신적 기술”의 적용, “적응적인 관리와 유지” 등을 기타 원칙으로 언급함

표 2. 갯벌복원 사업의 중요 원칙과 사업지 선정기준

복원사업 선정 기준	주요 내용
갯벌복원 목표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원목표가 구체적이고 생태적인가?</li> <li>· 갯벌훼손의 원인이 밝혀졌으며, 복원을 통해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면 갯벌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가?</li> <li>· 갯벌복원을 위한 적절한 대상이 선정되었는가?</li> </ul>
복원방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원의 방법이 기술적으로 적용가능한가?</li> <li>· 복원방법이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가?</li> <li>· 다른 방법에 비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수한가?</li> </ul>
복원에 따른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갯벌생태계가 복원되는가?</li> <li>· 복원된 갯벌생태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li> <li>· 갯벌복원사업이 사회적 의미를 갖는가?</li> </ul>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갯벌복원을 위해 지역의 의회나 행정기관 간 협조가 원활한가?</li> <li>· 갯벌복원 대상지역 주민과 협의하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가?</li> </ul>
복원지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원 이후 사후관리 방법이 적절한가?</li> <li>· 복원 이후 사후관리 방법은 지속가능한가?</li> </ul>

자료 : 저자 작성

2) 『하구복원법(Estuary Restoration Act of 2000)』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개발한 복원전략



## 갯벌복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나 토지소유권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권리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 필요

### ■ 바닷물을 다시 끌어들이거나 폐염전 등을 굴착하는 갯벌복원 사업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대상

- 갯벌복원 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와 함께, 제5호에서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대상으로 함
- 노둑길(연륙연도교)과 같은 구조물을 제거하여 갯벌의 바닥을 낮게 만들거나 갯벌에 인접한 토지를 갯벌로 환원하는 작업, 복원사업 중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공유수면 점·사용의 허가대상<sup>3)</sup>임
- 갯벌복원사업은 사업의 시행 주체와 공유수면관리청이 동일하기 때문에 향후 해양수산부가 갯벌복원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협의와 승인을 대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 ■ 토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경우 토지매입의 법적 근거와 방식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 갯벌복원은 과거 갯벌이었다가 간척된 농지나 (폐)염전 또는 (폐)양식장이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토지로 지적이 발급되어 있고 대부분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음
- 따라서 이들 토지를 갯벌, 즉 공유수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복원사업 이후 지적을 말소하여 공유수면으로 전환하게 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갯벌복원 사업 시행 시 토지수용 근거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정의가 필요함
- 특히 토지 매입은 기준 시점을 제공하여야 행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갯벌복원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고시와 같은 방식으로 공고해야 할 것임

3)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 점사용 허가가 아닌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나, 실제 협의나 승인의 절차와 형식, 내용이 허가의 방식을 준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허가와 같은 행정행위가 필요함

## ■ 무엇보다도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는 사업시행의 주체나 협의 및 허가의 주체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예를 들어 해역관리청이 관할하는 해역을 기준으로 갯벌복원사업의 추진주체를 구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해양수산청은 개별 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사업 우선순위 부여, 사후점검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복원을 통한 갯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법적 근거와 지침의 마련, 전문기관의 육성 등 필요한 시점

### ■ 기존 법률에서 복원은 훼손된 환경의 개선이나 개발행위에 따른 복원대책에 국한, 복원 대상지 선정이나 절차, 자원, 사업시행과 관리 등 구체적 내용 부족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훼손의 시간적 범위나 대상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개발행위 등 사업계획을 허가한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에게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등 민간사업자와 같은 원인행위자를 배제한 소극적이고 임의적인 규정에 불과함
- 「습지보전법」에서 역시 ‘습지개선지역’<sup>4)</sup>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 역시 갯벌복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함
-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갯벌과 관련한 신법의 제정을 통해 갯벌복원의 원칙, 대상, 기준,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여야 함

### ■ 갯벌복원의 특수성과 복합성을 고려한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

- 갯벌복원 사업은 갯벌 등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목표로 생태적인 목표와 수단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토지매입과 공학적인 시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
- 특히 복잡한 인허가와 실시사업 등 복잡한 복원 사업 전반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도 필요한데, 전문기관은 향후 하굿둑 개방을 통한 자연화 사업 등 갯벌복원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농지 매입, 수질관리, 복원사업 시공, 복원 기술 개발, 복원지역 사후관리, 수산자원 및 생태

4) 「습지보전법」 제8조 습지지역 중 습지개선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수준에서 복원과 관련한 언급이 존재함



관광 활용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한편 복원계획의 수립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을 환경부의 ‘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확보하여 갯벌 복원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생태계복원기사’ 등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함

## ■ 수요를 초과하는 국내 쌀생산과 수입 확대에 따른 농지의 채산성 악화는 간척농지를 갯벌로 되돌리는 ‘역간척’ 수요가 확대될 수 있으며,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 일정 발표(‘15)는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 하구개방과 갯벌복원에 대한 수요촉발 가능

- 부산광역시는 2015년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선언하면서 2017년 부분개방, 2025년 완전개방 일정을 제시하였고, 이후 신정부의 4대강 사업 전면검토와 수리권 조정 논의에 따라 향후 개방 일정이 확정될 예정임
- 하굿둑 개방은 주변지역의 갯벌생태계의 복원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향후 충남이나 전남권에서도 유사한 하굿둑 개방과 갯벌복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 ■ 갯벌복원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에 대응하여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

- 갯벌복원은 하구 복원은 물론 해중립 조성 등 수중생태계 복원 등 해양생태계 복원에 대한 국가수준의 비전과 종합계획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이행이 필요함
- 근거법률의 정비, 예산의 확보방안, 사후관리와 활용 등 구체적인 이행전략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록] 갯벌복원 사업 시행 지침(안)

표 3. 갯벌복원 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안)의 주요 내용

장	조문	조문 제목	주요 내용
총칙	제1조	지침의 목적	· 갯벌복원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와 고려사항을 밝혀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
	제2조	정의	· 갯벌복원, 사업계획, 실시설계, 모니터링, 사후관리, 전문기관
	제3조	적용 범위	· 갯벌복원사업의 대상(과거 갯벌이었으나 현재 토지적 이용이 있는 곳, 하굿둑을 통해 담수호 내 위치한 습지, 구조물 등으로 훼손된 갯벌 등)
	제4조	기본원칙	· 생태적 목표의 제시, 지역 내 협력,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생태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기술의 활용, 주변환경과의 생태적 연계성 확보, 모니터링을 통한 복원 성과의 측정, 복원성과의 활용과 확산
사업의 선정	제5조	사업계획 작성	· 공유수면 관리청(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른 사업시행자 구분 ·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복원의 목표, 공간범위 제시, 대상지의 생태계 현황, 훼손(형상변경)의 원인, 권리관계, 인허가 사항, 대략적인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복원사업의 일정, 사후관리 계획
	제6조	사업계획의 취합과 평가	· 기관별 역할: 시도(취합), 지방해양수산청(우선순위 부여), 해양수산부(사업선정) · 지역협의체 의견수렴(기초지자체, 지방청) · 자문위원회의 활용(지방청, 해양수산부) · 현장점검과 평가,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수정과 최종사업계획 작성
	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 선정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고시 · 공유수면 점사용 등 협의(향후 의제처리)
	제8조	예산 배정	· 신규 사업, 계속 사업, 마무리 사업 구분 · 예산배정의 원칙(마무리→계속→신규) · 예산감액의 경우(보고 등의 부실, 예산액 불용 등)
사업의 시행	제9조	실시설계	· 실시설계의 발주 · 실시설계의 내용: 공정, 비용, 상세일정 · 기술검토(지방해양수산청이 전문기관 의뢰) · 감독 및 감리기관 지정
	제10조	토지의 매입·보상	· 감정평가 후 협의 · 공유재산법 및 토지보상법 준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결
	제11조	사전 모니터링	· 대상지 및 주변지역 생태계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제출(기초→광역/지방청→해양수산부)
	제12조	착공 및 준공	· 공사발주 및 착공 · 준공검사 · 공정보고
	제13조	보고 및 점검	· 보고 의무자: 기초, 지방청(자체 시행) · 보고 검토 및 현장점검: 광역, 지방청, 해양수산부

장	조문	조문 제목	주요 내용
사후 관리	제14조	유지관리	· 기초/지방청 부담 · 유지관리 보고
	제15조	사후 모니터링	· 정부지원 · 전문기관 일괄 의뢰 · 모니터링 결과 보고
보칙	제16조	전문기관	·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검토 · 복원사업의 위탁 시행 · 전문기관의 기능
	제17조	지역협의체 구성	· 사업계획 작성 및 이행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 참여범위 및 운영
	제18조	자문위원회 운영	· 구성권자(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 구성원 : 학술, 기술, 시공, 제도 분야 전문가 · 역할 : 사업계획의 평가, 모니터링 결과 검토
	제19조	재검토기한	

## KMI 연구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국내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 방향	2017.09.07
제2호	한·투발루 협력증진을 위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2017.09.08
제3호	물류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	2017.09.11
제4호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2017.09.12
제5호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2017.09.13
제6호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중구 자갈치 시장 재개발을 통해 아름다운 해양도시 건설	2017.09.14
제7호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2017.09.18
제8호	항만 내 어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	2017.09.19
제9호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2017.09.28